'반쪽 심의' F1 특별법안 어떻게 되나

국비 특혜논란 해소 수정안 즉각 상정

한나라당 협조 절실…공공성 강화 방안 등 마련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F1(포뮬러원) 특별법안' 심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범여권 의원들 3명만이 참석하는 '반쪽 심의'를 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세 변화 없이는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왜 의결 연기됐나=한나라당 위원(최구식, 장윤석)들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 손봉숙 위원도 해외시찰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F1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 등이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6월 임시국회 통과에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무엇을 요구했나=법안심사소위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오도록 요구했다.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 제출한 'F1 특별법안'에는 '개최권료 360억 원과 시설비 등 전체 사업비(6천억 원으로 추산) 가운데 일부(1천800억 원으로 추산)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 조항이 '거액의 국비를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요구했다.

▲전남도의 대책은=문제가 된 특혜논란과 관련, 개최권료와 시설비 가운데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공성 부분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담배 광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광부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각 부처가 F1 특별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로부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북, 광주체전 보이콧?

경주특별법 묵은 갈등…도의회가 체전 참가 예산 삭감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도의회가 광주 전국체전 참가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 전국체전 참가 및 훈련비' 5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경북도 선수단이 금년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불참하는 초유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통상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 광주시의회의 반대 결의문에 대해 경북도민이 이해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간 갈등은 광주시의회가 이른바 경주 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법이 남발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위상 약화와 차별성 상실 등을 들어 지난해 10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발끈했고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광주시의회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경북도의회의 반발과 항의 방문 후, 광주시의회는 곧바로 해명과 함께 유감표명을 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광주체전 선수 참가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이 또 다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시·도가 모여 화합을 다지는 전국체전에 지자체가 불참한 전례가 없는 데다 양 지역 화합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양 시·도의회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 주 열리는 예결특위서 삭감된 전국체전 예산을 되살리는 방안을 도의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일부 표현상 문제가 있었을 뿐 결의문 취지가 확대 해석됐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볍게 다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은 "광주 문화도시특별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난립을 우려한 표현이었을 뿐 경주 역사문화도시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경북도의회가 체전 참가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재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2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 참석,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구회장 제주서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오늘까지 제주평화포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제주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제주평화포럼 이틀째이자 공식 개막일인 22일 제주지사 주최 만찬에서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현대·기아차그룹이 전했다.

정 회장은 포럼 인사 200여명과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만찬에서 "여수 세계박람회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정치·경제적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뿐아니라 동북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평화포럼'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며 참석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여수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 유치위원회 정찬용 상근 부위원장 등 국회·정부·민간 대표들이 정 회장과 함께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위한 의지와 열정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전세계 전·현직 각료, 정치·경제 지도자, 학계·언론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주평화포럼은 21~23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고, 정 회장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 고문이자 평화포럼 공동 주최측인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오시마 쇼타로 일본대사, 노베르트 바스 독일대사 등 BIE 회원국 주한 대사들을 비롯해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전 총리, 가이후 도시키 일본 전 총리, 피델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 등 포럼에 함께하는 인사 대부분이 참석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개최지 선정 투표일까지 전세계 190여개국의 법인, 지역본부, 딜러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여수 지지세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병두 의원 "노대통령, 총선 출마할수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범여권 진영의 통합 실패와 연말 대선 패배를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4월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민 의원은 22일 "노 대통령은 통합이 안될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논리를 보면 일관되게 자신이 정치이념과 가치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을 온전하게 유지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노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을 계승하는 세력을 묶어내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범여권이 통합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노 대통령은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 설

광주·경북의회 갈등 확산 방치할 건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21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 전국체전 참가 및 훈련비' 5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 제정과 관련, 광주시의회의 반대 결의문에 대해 이해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양 시·도 의회의 갈등은 광주시의회가 경주 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법이 남발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위상 약화와 차별성 상실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경북도의회와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했고 광주시의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여기에 도의회가 광주체전 선수 참가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양 시·도의회의 갈등은 다분히 감정적 성격이 짙은 데다 자칫 동서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자제해야 한다. 경북도의회가 지역 민의와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전 시·도가 모여 국민화합을 다지는 전국체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광주시의회도 예민한 문제를 별다른 고민이나 생각없이 없이 성급하게 성명을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오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특정 지자체의 전국체전 불참은 전례가 없는데다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양 시·도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이 지역화합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사소한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을 키워서야 되겠는가.

한나라당 후보 검증 결과가 '면죄부'라니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의 22일 검증결과 중간발표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검증위원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탈세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가 '당 기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둘러 '면죄부'를 준 꼴이다.

한나라당의 검증이 대선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청와대는 물론 범여권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당이 앞장서 경선후보의 흠집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의혹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에서도 검증위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검증 결과에 동의할지는 회의적이다. 검증위가 두 후보의 핵심의혹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검증이 두 후보측 해명을 그대로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증위원회가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진행되면 새로운 사태를 맞게 된다. 상대방 흠집내기와 폭로전 등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나라당은 본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선후보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의혹은 감추려 들면 더 부풀려지는 속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경선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를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형' '타입' 용어도 못쓴다

산자부, ㎡만 허용…편법 표기 단속키로

다음 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정부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은 미터법 표기 시행으로 내달부터 정부가 '평'과 '평형'을 쓰지 못하게 하자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카탈로그에 '형'과 '타입'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추후 법정계량단위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7월 이후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등 상업적 거래용도로 쓰이는 것들이다. /연합뉴스

건교부, 열차페리 사업 검토…2004년 하반기 폐기

건설교통부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열차페리 구상을 2000년부터 검토했지만 연구 용역 결과가 적합지 않아 2004년 하반기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00년부터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동북아 연결 복합물류 시스템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실시했지만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려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건교부는 2000년부터 3년에 걸쳐 한중 열차페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철도기술연구원에 맡긴 뒤 2004년 3월에 시설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받았고 그해 7월에 현지 실사 등을 통한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2차 보고서도 접수했다.

2004년 7월에 나온 이 용역 보고서는 열차 페리 전용부두, 인입선, 배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서 비용편입분석(B/C)을 1.113-1.109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징역 2년 구형

"사적 보복가해 법치주의 근본 흔든 사안"…내달 2일 선고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든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과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경제인과 한화그룹 임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이날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강대원 측 계좌에 뭉칫돈 입금 포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늑장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측의 계좌에 4월초 1천만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 전 과장측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한화 측에서 전달한 돈으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에서 경찰 간부와 한화측 돈거래 사실이 처음 드러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光日만평

- 김종두

아예… 관심도 없다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편집부 2200-629 / 정치부 2200-616 / 경제부 2200-617 / 사회1부 2200-618 / 〈FAX 222-4267〉 / 사회2부 2200-619 / 〈FAX 227-0118〉 / 문화생활부 2200-626 / 여론매체부 2200-628 / 체육팀 2200-627 / 사진부 2200-690 /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 〈FAX 222-8005〉 / 광고국 2200-521 / 〈FAX 227-9500〉 / 디자인 2200-536 / 사업2부 2200-552 / 문화사업국 2200-541 / 〈FAX 222-0195〉 / 판매부 2200-551 / 〈FA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